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강원도민일보	22면	강원도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1
江原日報	온라인	강원도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1
연합뉴스		강원도의회, 2022 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9명 위촉	2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첨단과학포럼	3
강원도민일보	22면	"유보통합 문제 해결 현실적 대안 마련 힘쓸 것"	4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 강정호.김용래 도의원	4
강원도민일보	02면	겸직 많은 지방의회 이해충돌 심사 드물어	5
인제인터넷	온라인	강원 내수면 뷰티클린 캠페인 행사 개최	5
江原日報	16면	“ 화천 시내 진입로 완전한 4차선 추진 ”	6
강원도민일보	17면	[의정칼럼]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미래세대 위해 반드시	7
江原日報	13면	연안채낚기 복합연합회 단합대회	8
江原日報	21면	[동정] 김길수 강원도의원(영월)	8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김길수 도의원(영월)	8
강원도민일보	11면	[동정] 김용래(강릉) 도의원	8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	8
강원도민일보	02면	김 지사 "산불피해 극복 위해 강릉 찾아 달라"	9
강원도민일보	02면	판 커진 공공기관 지방이전... 도 우선순위 확보 보폭 키워	10
강원도민일보	19면	문화예술·유산 예산 숨통 틔웠지만... 중장기 시각은 글썽	10
江原日報	04면	도교육청 올해 ‘ 안심유치원 ’ 본격 운영	10
강원도민일보	06면	강원도 출생아수 감소 25개월 만에 멈췄다	11
강원도민일보	06면	청년 디딤돌 적금·취업준비 쿠폰 지원 논의	11
江原日報	02면	전세 사기 의심 사례 속출 道·LH 피해자 긴급 지원	11
江原日報	02면	영월~삼척 고속도 예타 선정 발표 다음 주로 연기	12
강원도민일보	02면	춘천 고은리 도 신청사 부지 토지조사·보상 내년 3월 완료 ...	12
江原日報	05면	지진 취약 노후아파트 절반 강릉·동해에 몰려	13
강원도민일보	17면	[사설] 군사지역 어려움 고민은 하나	14
강원도민일보	17면	[사설] 잦은 지진 경각심 가져야	15

江原日報	19면	[사설] 동해안 나흘 동안 19차례 지진, 빈틈없이 대비해야	16
江原日報	19면	[사설] 강원도청 강릉 제2청사, 역할 제대로 해야 한다	17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7일 (목)

인물 22면



강원도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촉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26일 도의회상담실에서 2022회계연도 강원도 및 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회 9명을 위촉했다.

江原日報

2023년 04월 26일 (수)

종합

강원도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촉



강원도의회(의장:권혁열)는 26일 2022회계연도 강원도 및 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회 9명을 위촉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도의원 3명,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3명, 전직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됐다. 대표 위원은 홍성기(홍천) 도의원이 위촉됐다.

결산검사위원회는 다음달 15일까지 지난해 도와 도교육청이 집행한 예산과 기금,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부당한 집행과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2023년 04월 26일 (수)
지역

강원도의회, 2022 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9명 위촉



강원도의회, 2022 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9명 위촉

(준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의회는 26일 도의회 상담실에서 2022 회계연도 강원도 및 도 교육청의 예산집행 실적을 검사하기 위해 결산 검사 위원 9명을 위촉했다. 결산 검사 위원은 도의원 3명,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3명, 전직 공무원 3명으로 구성했다. 위원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의회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고 결산 검사를 한다.

지난해 도와 도 교육청이 집행한 예산과 기금,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이 애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부당한 집행과 낭비는 없었는지 살핀다.

결산 검사를 마친 뒤 감사의견서를 집행기관에 내면, 집행기관은 이를 첨부한 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해 결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권혁열 의장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결산 검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nanys@yna.co.kr

(끝)

기타 검경일보, 이코노믹포스트 등 35개 언론사 보도

江原日報

2023년 04월 26일 (수)

정치

[포토뉴스]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첨단과학포럼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첨단과학포럼이 25일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에서 김진태 지사, 양항자 국회의원,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첨단과학포럼이 25일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에서 김진태 지사, 양항자 국회의원,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첨단과학포럼이 25일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에서 김진태 지사, 양항자 국회의원,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25일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첨단과학포럼에서 양항자 국회의원이 기초강연을 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7일 (목)
인물 22면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제16·17대 회장 이·취임식이 26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려 16대 김경미 회장이 이임, 제17 유종운 회장이 취임했다.

“유보통합 문제 해결 현실적 대안 마련 힘쓸 것”

도어린이집연합회장에 유종운 취임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이 26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려 김경미 제16대 회장이 이임하고, 유종운 제17대 회장(영월 쌍용어린이집 원장)이 취임했다. 강원지역 18개 시·군 내 어린이집 원장 80여명을 비롯해 육

동한 춘천시장, 한기호 국회의원,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등이 이날 참석해 축하했다. 유종운 회장은 “보육분야의 핵심 현안인 유보통합 문제와 현실과 동떨어진 어린이집 지원 등 과제가 많아 어깨가 무겁지만 대안을 찾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주영

江原日報

2023년 04월 26일 (수)
종합

[동정]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 강정호.김용래 도의원

김기홍(원주) 도의회 부의장은 27일 오후 3시 원주빌라드아모르에서 개최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도지회 정기총회에 참석.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27일 오후 2시 속초엑스포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속초시자원봉사릴레이 출범식에 참석.

김용래(강릉) 도의원은 27일 오후 4시 롯데칠성음료 강릉공장을 찾아 처음처럼&새로 브랜드 체험관을 견학.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7일 (목)

종합 02면

검직 많은 지방의회 이해충돌 심사 드물어

춘천경실련 조사 기초의원 62% 검직
도 포함 6곳 제외 13곳 심사정보 없어

강원도내 지방의원 10명 중 7명 팔로
의원 외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이해충
돌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지방의회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강원도의회 의원 및 18개 시군의회의
원 검직 실태 발표' 보도자료를 배포했
다. 춘천경실련이 지방의회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살펴

본결과, 도의원 49명 중 38명 (77.5%)
이 111건의 검직을 신고했고, 이중 18
명이 보수를 받고 있으나 수령액은 비
공개였다. 또, 기초의원 174명 중 108
명 (62.1%)이 283건의 검직을 신고했
고, 이중 51명 (47.2%)이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보수액은
3526만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회
에서 검직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 정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43조 검직금지)에 따
르면, 지방의회의장은 타공직 및 이해
충돌 기관 등 청렴 의무 소지가 있는 겸

직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의견
을 들어 사임을 권고해야 한다. 그러나
철원·원주·속초·춘천·태백·강원도
(광역) 등 6곳을 제외한 13곳에서 심사
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공개한 강원도의회 등은 이해충돌 여
부에 대해 '해당없음' 등을 명시했다.

경실련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동일하게 지방의원도 검직을 금지해야
하지만, 이를 금지할 경우 수당이 적은
지방의원 출마를 기피할 수 있다는 우
려 때문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직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적
절성 심사도 부실했다"고 지적, 조례 개
정을 통한 검직 신고 의무화, 임대업 제
한 등을 제안했다. 이설화

인제인터넷신문

2023년 04월 26일 (수)

강원

강원 내수면 뷰티클린 캠페인 행사 개최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종철)는 4월 27일, 원주시 외 4개 시군에서 깨끗하고 쾌적한
내수면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강원 내수면 뷰티클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바다 및 내수면의 쓰레기 및 폐어구, 폐기물 등을 수거하
기 위해 동해안 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6개 시·군과 원주, 홍천, 인제, 춘천, 양구
등 내수면 5개 시·군이 동시에 어업인단체 등과 함께 강원 연안 및 내수면에서 환경정화활
동을 실시하는 캠페인으로, 6월과 9월에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원주시에서는 강원도환경본부,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 강원도의회 등 도 기관과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문막읍 등 원주시 관계자 및 원주섬강어업계, 문막읍이장협의회 등
지역주민 약 60명과 함께 문막읍 섬강 일원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하천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수거 처리하고 섬강을 방문하는 유어객을 대
상으로 깨끗한 내수면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지도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철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도내 내수면을 방문하는 캠핑객 및 유
어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원 강원 이미지 제고 및 내수면 생태환경 개
선을 위해 정화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어업인도 어장의 수시 정화작업을 통한
수질개선 및 어족자원 증강에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인제인터넷신문]심광섭 기자

심광섭(greeninje@hanmail.net)

江原日報

2023년 04월 27일 (목)

지역 16면



◇화천대교 재가설 공사 착공식이 26일 화천체육관 앞 고수부지에서 김진태 도지사, 한기호 국회의원, 장광선 2군단장, 최문순 화천군수,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화천 시내 진입로 완전한 4차선 추진”

화천대교 재가설 착공식
김진태 지사 참석 밝혀
“500억 투입 교량 추가”

【화천】화천대교 재가설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교량을 하나 더 설치, 화천시내로 진입하는 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된다.

김진태 도지사는 26일 화천대교 재가설 착공식에 참석해 “강원도는 현재 부다리 터널에서 화천시내로 진입하는 지방도 407호선을 4차선으로 만들고 있는데 향후 500억원을 더 투입해 교량 하나를 추가, 화천시내로 진입하는 도로를 완전히 4차선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기호 국회의원도 “화천 진입로에는 2차선 교량이 하나 더 필요해 모두 4차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문순 군수는 “오늘 착공한 화천대교 재건설은 행안부 예산으로 건설하지만 기존 교량을 철거 후 새로운 교량은 강원도 예산으로 설치해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천시내로 진입하는 지방도 407호선은 편도 2~3차선으로 돼 있으나 화천대교부터는 편도 1차선으로 좁아지기 때문

에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어 왔다.

화천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천대교 재건설 후 기존 교량을 철거한 뒤 그 자리에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는 계획을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

한편 화천대교 재가설 공사는 국비와 군비 등 495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6년 4월 준공된다. 장기영기자 kyjang3276@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7일 (목)

오피니언 17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미래세대 위해 반드시 해내야

의정칼럼

김용래

강원도의원·전국청년지방의원
협의회 강원도협의회장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3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새해 첫날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같은 맥락에서 3대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43명 전원은 개혁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으며, 4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3대 개혁은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다.

대통령께서도 가장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 말한 ‘노동개혁’은 미래 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 안정성 등 4개 원칙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의무는 무시하고 권한만 가지려는 노조의 비민주적 행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이뤄질 수 없기에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계의 불법·부조리 근절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 현장의 안전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두번째로 ‘연금개혁’은 현세대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는 노령 인구와 수급 기간은 늘어나 기금 소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2041년도에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극심한 부담감에 연금개혁을 주저한 사이 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연금개혁을 늦출수록 젊은 세대가 막중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정부는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의 노후를 진정으로 살피

는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공론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아래 우리 경제의 체질을 탈바꿈하고 성장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 기술·혁신을 뒷받침할 창조적 인재양성이 중요하다. 교육시스템 혁신을 비롯해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마련을 통해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교육에 대한 관점 변화와 새로운 인식,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함으로써 대한민국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다시 설계하는 각오로 조직부터 교육 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한 역사적 과업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정부는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깊게 도모한다는 심모원려(深謀遠慮)의 자세로,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江原日報

2023년 04월 27일 (목)
지역 13면



연안채낚기 복합연합회 단합대회 제9회 강원도연안채낚기 복합 연합회(회장: 윤국진) 한마당단합대회가 26일 오전 거진공설운동장에서 박광용 부군수와 김일용 군의장, 김용복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최영희 고성군수협장, 기관·단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동정] 김길수 도의원(영월)

김길수 도의원(영월)은 27일 오전 10시 동해안 지역 시멘트 공장을 방문해 폐기물 및 재생 자원 활용 실태 등을 확인.

江原日報

2023년 04월 27일 (목)
인물동정 21면

동해안 시멘트공장 점검

◇김길수강원도의원(영월)
은 27일 오전 10시 동해안 시멘트공장을 방문해 재생자원 활용실태 등을 확인.



2023년 04월 26일 (수)
사회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7일 (목)
인물동정 11면



김용래(강릉) 도의원은 27일 오후 4시 롯데칠성음료 강릉공장의 '처음처럼&새로' 브랜드 체험관을 견학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7일 (목)
인물동정 16면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27일 오후 2시 속초엑스포공원서 열리는 속초시자원봉사 릴레이 출범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7일 (목)
종합 02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6일 서울 을지로입구역 및 명동거리 일대에서 '미스터트롯2' 진선미 3인방(가수 안성훈·박지현·진해성)과 함께 '가자! 동해안으로!' 캠페인을 펼쳤다.

김 지사 “산불피해 극복 위해 강릉 찾아 달라”

서울서 ‘가자 동해안으로’ 캠페인
미스터트롯2 출연진 등 동참 호응

지난 11일 발생한 강릉 산불로 강릉지역 관광, 숙박, 음식점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진태 도지사가 26일 서울에서 ‘가자! 동해안으로’ 강릉 여행 홍보 전면전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여행업협회(KATA) 주관으로 열린 ‘한국관광상품개발 상담회’에 참석해 한국관광업계 관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강릉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방문 및 동해안 관광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김 지사는 서울 을지로입구역 및 명동거리로 이동해 산불피해 지역인 강릉으로 여행와 줄 것을 호소하며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가자! 동해안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건 거리 캠페인에는 TV조선 ‘미스터트롯2’에서 각각 진선미에 오른 가수 안성훈·박지현·진해성과 연예인 사회 공헌재단 ‘화이트타이거즈’가 동참, “강릉으로 여행와 주시는 것이 최고의 자원봉사”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김 지사는 “산불 피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강릉을 찾아 달라, 강원도민과 강릉시민들도 친절과 정성으로 전국의 여행객들을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강원도민일보

판 커진 공공기관 지방이전... 도 우선순위 확보 보폭 키워

2023년 04월 27일 (목)
종합 02면

2차 이전 규모 500곳 확대 검토
타 광역지자체 도전장 대응 시급
김 지사 공약 '금융' 경쟁 불가피

속보=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규모를 당초 360곳(본지 4월4일자 2면)에서 500곳까지 확대 검토하면서 강원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유치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원도가 유치전에 뛰어들 금융 분야 기

관을 타 광역지자체도 유치전에 뛰어 들면서 유치 당위성 논리 개발 등 강원도의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까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기관 선정 기준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규모는 당초 360곳으로 파악됐었다.

하지만,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및 지방전주단 부단장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차

이전 대상 기관 규모에 대해 "500개 이상 될 것 같다"고 답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되는 양상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범주가 기존 혁신도시에 더해 비혁신도시까지 확대되면서 유치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수도권에 남은 기관과 새로 생긴 기관을 포함해 다수사와 출자사까지 이전 대상으로 검토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강원도는 한국은행을 포함해 금융감독원 등 금융 관련 공공기관과 코레일 유통, 대한체육회, 국방연구원 등 32개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고 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김진태 도지사의 공약인 한국은행 유치를 중심으로 한 주요 금융기관이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농협 등 주요 금융기관 유치전에 타 광역지자체도 뛰어들면서 우선순위가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부산시와 전남도, 전북

도 등도 금융기관 유치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이 내년 4월 예정된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면서 각 지역 정치권도 유치전에 가세했다.

도 관계자는 "강원 영서지역은 타 광역단체보다 수도권과의 인접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고, 영동 지역의 특색과 맞는 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이전 기본계획 발표 등 이전 기준과 방향을 보면서 이전 논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문화예술·유산 예산 숨통 트웠지만... 중장기 시각은 글썽

2023년 04월 27일 (목)
문화 19면

도문화재단연구소 출연금 첫 확보
독립예술극장 신영 지원 등
2024 문화올림픽 행사 다양

도 건축재정 직격탄 후 보완
특자도 맞춘 사업 부족 평가도

지난 해 강원도의 건축재정 기초 속에 직격탄을 맞았던 강원지역 주요 문화예술·유산사업들에 숨통이 트였다.

대폭 삭감됐거나 반영되지 않았던 문화예술 분야 사업 예산들이 지난 25일 강원도의회에서 최종 통과된 2023년 제1차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

해 일부 확보됐다.

먼저 강원도문화재단연구소 출연금 8억 원이 연구소가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 편성됐다. 도문화재단 연구소는 출연금 없이 출자금만으로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코로나19 기간 각종 발굴사업 감소 등의 여파가 컸던데다, 적은 금액의 수익계약에도 연간 인력을 운용해야 하는 특성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재정난을 겪자 연구소의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출연금 편성 필요성이 일찌감치 제기됐었다. 출연금은 인건비와 문화유산 조사·연구, 보호 관리 등 운영비에 쓰인다. 심사 과정에서 다른 시·도보다 늦게 출발한 고대역사문화권(예맥역사문화권) 연구 강화, 이와 연계한 강원

학연구센터 운영 변화 필요성 등이 거론돼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강원도 유일의 독립예술 전용 영화관인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지원에 산 6000만원도 반영됐다. 도와강릉시가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강릉시도 같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 내달 강릉시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1년까지 강릉시가 5000만원을 지원하다 지난 해 도와 시가 함께 부담했으니 올해 예산에는 누락돼 재정난을 겪었다. 이후 '신영극장을 부탁해' 캠페인이 호응을 얻으며 상반기 운영을 이어왔다.

홍천에 이어 평창에서 열리는 3년 단 순회형 시각예술축제 '강원키즈트리엔날레 2023' 개최 예산도 1억 7169만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를 통해 올해

총 4억 6800만원을 확보했으니 강원작가트리엔날레로 치러진 지난 해 예산과 비교하면 무려 60% 가까이 줄어들었다. 2024년은 더 큰 규모의 국제트리엔날레로 준비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준비는 과제로 남아 있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앞두고 문화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도 마련된다. 독립무용단과 독립국악관현악단이 합심해 G-100일을 기념한 특별공연을 별도로 준비한다. 또 강릉 경포해변에서 설치미술 작품과 공연 등을 선보이는 '바닷가 갤러리'를 비롯해 강원 문화유산 전시, 성화봉송지와 배후도시 불입 문화 프로그램, 개최도시 대표공연 등이 줄이어서 예정이다.

백담사와 인제군이 추진하는 설악문학관 건립에도 올해 강원도가 10억 원을 지원한다. 만해한용운 스님에 이어 오현스님 등 불교문화가 조명되는 지역문화유산 사업에 탄력 받게 됐다.

다만 각 사업 지속성과 효과를 높여려면 보다 중장기적 관점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춘 특색 있는 프로젝트가 부족하다는 평도 나온다. 도내한 시각예술작가는 "일부 사업은 개최 의지가 없다는 말이 나올만큼 막대한 우려가 컸는데, 일부 풀렸다"며 "앞으로는 임박한 시점에 행사 예산을 풀기 보다는 도정의 문화예술 철학을 보여주는 프로젝트가 준비하는 데 더욱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어진

江原日報

2023년 04월 27일 (목)
사회 04면

도교육청 올해 '안심유치원' 본격 운영

강원도교육청은 26일 올해부터 '안심유치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심유치원은 건강·안전 관련 분야의 역량 강화 및 지원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유치원을 뜻한다.

특히 이번에 안심유치원으로 선정

된 유치원은 100개이며, 강원도교육청은 유치원당 130만원씩을 지원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또 안심유치원 평가 세부 매뉴얼을 통해 유치원의 안전 역량을 진단하고 학부모와 유치원 간 신뢰의 기반을 다진다. 원선영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7일 (목)
경제 06면

강원도 출생아수 감소 25개월 만에 멈췄다

통계청 발표 2월 감소율 0.0%
동월 출생아수 전년비 27명 ↑
정주여건 개선 30대 유입 주효

2년1개월만에 강원도 출생아수 감소가 멈췄다. 코로나19기간 정경 강원도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30대 청년들의 인구 유입이 늘어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2월 출생아수를 보면 도내 2월 출생아수는 602명으로 전년동월비(575명) 27명

(4.7%) 늘었다. 출생아수 감소율(전년누계비)로 보면 강원지역은 2021년 1월 1.8%를 기록한 이후 25개월(2년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출생아수 감소가 이어져왔으나 지난 2월 감소율이 0.0%로 멈췄다. 전국 2월 출생아수는 1만9939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66명(-3.7%) 감소하며 2만명선이 붕괴됐다. 시도별로는 전년동월에 비해 강원과 대구, 인천 등 5개 시도는 증가, 서울, 부산 등 12개 시도는 감소했다.

도내 출생아수는 주 결혼연령층인 30대 청년들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강원지역 정착을 선택하면서 자연스럽

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시군구·성·연령별 순이동자수를 보면 최근 10년간 강원지역 30대(30~39세) 순이동자수는 2013년 396명에서 2017년 776명을 기록했다. 2018년 -475명으로 감소세로 전환했으나 최근 3년동안은 2020년 1310명, 2021년 1281명, 지난해 1325명 순으로 1000명대를 넘어섰다. 시군별로는 지난해 원주 915명, 춘천 523명, 속초 218명, 동해 115명, 삼척 107명 순으로 증가했으나 군부대 이전 등으로 인해 접경지역은 화천 -255명, 철원 -134명, 양구 -78명 순으로 각각 줄었다.

현재 지자체별로 춘천시는 올해 하반기 고령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금 등 주거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원주시는 저출산 대응, 정주여건 향상, 일자리 창출, 교육환경 조성 등 올해 145개의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20대(20~29세) 순이동자수는 2018년 -7240명을 기록한 뒤 2019년 -5651명, 2020년 -4829명, 2021년 -4574명, 지난해 -2672명으로 여전히 인구 유출이 이어져 청년 일자리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호석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7일 (목)
경제 06면

청년 디딤돌 적금·취업준비 쿠폰 지원 논의

강원도 일자리분야 시군 시책간담회
강원도가 18개 시·군 일자리부서 담당자들과 강원도 민선8기 일자리 신규·역점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성공추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도는 26일 강릉시 녹색도시 체험센터에서 '2023년 강원도 일자리분야 시군 시책간담회'를 개최해 일자리 업무추진에 관련한 시군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청년디딤돌 2배적금 사업에 대해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사용자 교육을 병행, 시군 담당직원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대민서비스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 정부합동평가 일자리지표의

획기적 목표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정책을 확대하고 신산업 교육·훈련 → 구직활동 지원 → 취·창업 활성화 → 장기근속여건 조성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체계적인 일자리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지원 중에 있다. 도의 일자리 공약으로는 청년취업준비 쿠폰 지원, 청년창업자금 무이자대출, 청년 디딤돌 2배적금 등의 사업이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산불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지역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강릉에서 개최, 도 일자리과 전 직원과 참석 시·군 담당자들은 간담회 이후 강릉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자체 추진했다. 김호석

江原日報

2023년 04월 27일 (목)
종합 02면

전세 사기 의심 사례 속출 道·LH 피해자 긴급 지원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강원도 내에서도 의심 사례들이 식별됨에 따라 강원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 주거시설 확보에 들어갔다.

도와 LH에 따르면 원주시와 춘천시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가 확인되면서 피해 발생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인천, 경기 등에서 벌어진 대규모 사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건물이 임의 경매로 넘어가는 등 세입자의 금전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만큼 도와 LH 강원지사는 18개 시·군마다 긴급 주거 지원용 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피해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며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윤호기자

江原日報

2023년 04월 27일 (목)

종합 02면

영월~삼척 고속도 예타 선정 발표 다음 주로 연기

道 선정 위해 총력전 펼쳐

속보=강원지역 최대 역점 SOC로 꼽히는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여부 결정(본보 지난 17일자 1면 보도)이 1주일 뒤로 연기됐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당초 27일 재정평가위원회를 열어 영월~삼척 고속도로를 비롯 전국 SOC 사업 등의 예타 조사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다음 주로 일정을 미뤘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이번에 예타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야 후속 절차 추진이 가능하다. 비용대비편익(B/C)이 0.3 수준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다소 낮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예타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될 경우 종합평가 과정

에서 지역균형발전 측면의 정책성과 경유 노선의 개발 수요를 추가 발굴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강원도의 판단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타 조사 대상 선정을 건의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기영기자 answer07@

강원도민일보

춘천 고은리 도 신청사 부지 토지조사·보상 내년 3월 완료 목표

속보=강원도가 춘천 고은리 신청사 건립(본지 3월8일자 9면)을 위한 토지조사·보상작업 완료 시점을 내년 3월 목표로 잡고 이르면 내달초부터 토지·건물 등 지장물 조사에 착수한다. 토지 협의 절차가 순항하면, 신청사는 2026년 상

2023년 04월 27일 (목)

종합 02면

반기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된다.

강원도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보상업무대행기관으로 강원도개발공사를 선정한다. 이어 오는 6월까지 1차 토지 조사를 완료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7월 중엔 토지 소유 주민대표와 춘천시 부시장 등 8~16명으로 구성되는 보상협의회를 꾸린다.

보상금 산정은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편입 토지 정밀조사 과정을 거쳐 내년 2월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도는 보상협의회를 통해 내년 3월까지 보상금 지급과 협의를 완료해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계획이다. 김덕형

江原日報

2023년 04월 27일 (목)

사회 05면

지진 취약 노후아파트 절반 강릉·동해에 몰려

내진설계 의무 이전 134개 단지
강릉 43곳·동해 20곳 가장 많아
민간 건축 10곳중 9곳도 무방비
도 “내진 보강사업 활성화 추진”

지진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들이 강원지역은 동해안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들어 동해안에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강원도에 따르면 국내에 내진 설계 의무화가 이뤄진 1988년 이전 지어진 노후 아파트는 도내 134단지로 도내 전체 아파트(1,270단지)의 11%에 달했다.

노후 아파트를 시군별로 보면 강릉이 43단지로 가장 많았고, 동해가 20단지, 삼척·춘천이 각 14단지, 원주 11단지, 태백 10단지, 속초 8단지 순이었다.

국내 내진 설계 기준은 1988년 처음으로 만들어져 수차례 강화됐다. 규모 5.0 이상이었던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을 계기로 건축법이 개정됐고, 현재 내진 설계 의무 기준은 ‘2층 이상 또는 높이 13m 이상,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공동주택’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강원도의 민간 건축물 10곳 중 9곳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거나 내진 보강을 하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 상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내 민간 건축물 33만 7,127동 가운데 내진 성능이 확보된 곳은 3만 7,537동으로 내진율이 11%에 그쳤다.

정부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참여도는 매우 저조하다. 2021년부터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료시설, 보호시설 등)이 지진 안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의 90%를 지원 중이지만, 지난 2년간 평가를 받은 곳은 3곳에 그쳤다.

강원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7일 (목)

사설/칼럼 17면

군사지역 어려움 고민은 하나

-지자체 한계, 중앙정부 특별자치 처방술선하길

북과 대치하는 최일선 강원도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군사분야와 관련된 의제입니다. 단순히 안보를 명분으로 규제와 제약을 가하는 사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년 주둔한 군부대가 갑작스럽게 이주하거나 군부대와 오랜 세월 수의계약으로 거래해 온 급식 농특산물 유통규모를 줄여 현지주민 생계와 생존을 위태롭게 해도 안보를 내세우면 관철이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한동안 군인 탈영에 따른 불안이 이어지다가 최근엔 경악할 만한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문화적 영향까지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물론 지역사회와 군부대 협력 공동사업이 다각적이고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근래 발각된 육군장교와 군의관 성범죄 사건은 부정적인 파급력이 큼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꼬여 무려 3200여건의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 혐의입니다. 가해장교는 임관후에도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군부대와 물리적으로 장소가 가까운 지역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등은 1심에서 징역 16년형에 그친 것을 두고 무기징역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이번 장교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군부대 밀집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내륙과 해안 접경지시군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군사부문에 대한 여러 불편한 사항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 현안이 불합리한 어업 조업한계선 개선 및 야생 멧돼지 차단울타리 관리구역 재설정 등 생업과 긴밀한 사안입니다. 관광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경관지대에 자리잡은 여러 군부대 휴양시설에 대한 이전 요구가 나왔습니다. 용도폐기된 군사시설 해제 및 활용에 적극 나서길 촉구합니다.

접경지 지자체는 70여년간 지속된 규제로 인해 그 어떤 산업을 발전시킬 기반이 아예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 특성에 맞게 스스로 발전계획을 세워 추진하라는 입장이지만, 이는 실상 지역 현실을 파악하지 않은 횡포에 가깝습니다. 안보 특성상 국방부와 관련된 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고,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군 시설 이전 경비조차 버겁습니다. 중앙정부가 술선택 특별자치도 접경지 시군별 처방과 대안을 내놓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번에도 안보를 명분으로 조치에 진전이 없다면 특별자치에 따른 막연한 기대감은 언젠가 불만과 비판으로 팽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7일 (목)

사설/칼럼 17면

жат은 지진 경각심 가져야

-동해해역 이틀새 17차례...대응책 필요

동해시해역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오전 5시 30분을 기점으로 지진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 강원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발생한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바다 지진은 규모가 클 경우 해일을 일으켜 해안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업 중인 어선에 영향을 미치고, 선박들이 정박하는 항구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기상청과 지자체는 지진 발생 상황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호 연락 체계를 유지해 비상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해시 북동쪽 바다에서 이틀 동안 무려 17차례의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25일 오후 3시 55분쯤 동해시 북동쪽 50km 해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오전 5시쯤 3.1 진도로 발생한 지 11시간만입니다. 규모로만 따지면 강원도 역대 지진 중 일곱 번째로 큼니다. 진앙은 북위 37.86도, 동경 129.49도이며 지진 깊이는 33km입니다. 바다가운데서 일어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분석됐지만, 이날 하루에만 이 일대에서 총 4차례 발생해 관계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내 각 지역이 지진 영향권에 든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충북 괴산군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4.1의 지진의 여파가 원주부론·영월·주천·횡성·청일·평창·면은·인제 지역에서 감지됐습니다. 지난해 까지 최근 3년 동안 북강원도를 포함해 강원도내 지진은 총 185건입니다. 해마다 6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2월과 3월 삼척에서 각각 규모 2.3, 2.5의 지진이 발생해 등빈도가 늘고 진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강원도가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입니다.

아직 큰 피해는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빈도와 추이입니다. 기상청은 강원도 해저에서 15회 이상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기간 횡수가 많은 점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기상당국과 시군은 수시로 정보를 교환해 혹시 생길지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기관과 주민과의 정보 공유도 필요합니다. 지진 피해가 잦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효율적인 대응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지질 구조와 활성단층 조사 등 연구 작업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3년 04월 27일 (목)

사설/칼럼 19면

동해안 나흘 동안 19차례 지진, 빈틈없이 대비해야

26일 낮 12시15분 동해시 북동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해역에서는 지난 23일부터 25일 오후 3시55분까지 규모 2.0 이상~3.5 이하의 지진이 8차례, 규모 2.0 미만의 지진이 10차례 이어지는 등 나흘 동안 총 19번의 지진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지진 발생 모니터링 등 위기 징후 감시체계를 가동했다. 강원도는 도내 18개 시·군청에 배치된 지진가속도 계측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지진 대비 상황 관리에 돌입했다. 또 기상

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진 발생 상황 모니터링과 지진 정보의 수집·전파체계를 구축했다. 올 2월 튀르키예 대지진 참사의 기억이 아

직도 선명하다. 강원도는 과거부터 큰 지진이 자주 일어났던 지역이다. 최근 들어서는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도민들의 공포도 커지고 있다.

강원도 내 지진 발생 빈도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언제 어디서 고강도 지진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지진 대비는 아직까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2017년 법을 개정해 모든 신규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의 소규모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한계가 있다.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이 전체의 15.3%에 불과하다. 도내 건축물의 내진율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물 등은 지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등

대비책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다.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철저한 대비밖에 없다. 주요 시설부터 내진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량, 터널, 댐, 발전소, 고층 아파트, 노후 건물 등 각종 구조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건축물의 내진 보완 작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진 징후 모니터링 강화, 대응 매뉴얼 점검, 실전 같은 대피 훈련 상시화 등 재난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할 때다.

이번 19번의 지진을 경각심을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지진 대비가 미흡한

규모 2.0 이상 9번, 2.0 미만 10번 발생

강원도 ‘더는 안전지대 아니다’ 공포 확산

재난 경각심 높여 선제적 대비 계기 삼아야

강원도의 경우 강진이 발생하면 그야말로 큰 재앙이다. 지구촌 곳곳의 규모 큰 재앙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최악의 지진 사태를 염두에 둔 선제적인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도민들에 대한 지진 대응 교육 및 훈련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지진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진은 대형 재난이다. 안전은 물론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대응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재앙을 막을 순 없어도 최소화할 수는 있다.

江原日報

2023년 04월 27일 (목)

사설/칼럼 19면

강원도청 강릉 제2청사, 역할 제대로 해야 한다

강원도청 강릉 제2청사 개청은 김진태 지사의 공약이다. 개청에 차질이 생겨선 안 된다.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즉, 행정 절차 하자 논란을 빚어 온 강원도청 강릉 제2청사 준비 예산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삭감되는 진통 끝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에서 되살아나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제 조기에 예산 집행이 가능해져 김 지사가 발표한 7월1일 제2청사 개청도 순항할 전망이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21일 2023년도 제1회 도주가경정예산안과 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2차 회의를 열어 예산안 조정을 마무리했다. 예결특위는 당초 추경안에 반영된 제2청사 준비 예산은 상임위 예비심사대로 24억7,900만원을 삭감했지만, 제2청사 개청이 지역 숙원인 점과 근무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해 19억7,300만원을 기관공통재정 운영 사업으로 대체 편성했다. 이어서 도의회는 다음 달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제2청사 출범에 따른 도의 조직개편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다듬어야 한다. 강원도청 강릉 제2청사의 조직개편안은 2급 본부장 산하 3국 11개과로 확정됐다. 공식 명칭은 ‘글로벌지역본부’다. 도청 강릉 제2청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역은 동해안이

다. 특히 강릉은 춘천과 원주에 비해 행·재정적 측면에서 소외돼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도청 강릉 제2청사가 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눈에 띄는 대목은 산하에 미래산업국, 관광국, 해양수산국 등 3개 국이 신설된다는 점이다. 갈수록 지리·경제·정치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동해안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지금은 오히려 ‘동해안 발전전략’에 시동을 걸고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북방까지 확대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도청 강릉 제2청사의 3개 국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기간조직으로서의 안정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빠른 변화의 시대에 걸맞은 행정의 체질이 동시에 달라져야 한다. 그간 행정체제와 조직의 변화는 수없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과연 그 같은 노력이 모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강원도청 강릉 제2청사 개청은 지난 수십년간 지탱해 온 행정에 대한 안팎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 그러자면 일차적으로 여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생활이 불편해서는 곤란하다. 공무원들이 걱정하는 정주 여건과 사무공간 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